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6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3월 15일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조경란_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 서방 자본주의+민주주의 VS.
중국 마르크스-레닌주의+천하주의
2. 신중화제국체제와 유교의 부활
3. 천하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의 21세기 버전인가
4. 중화민족공동체와 일방적 동화주의
5. 중국 지성의 위기와 한중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조경란_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 서방 자본주의+민주주의 VS. 중국 마르크스-레닌주의+천하주의

중국은 2022년 10월의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023년 3월 13일에 폐막한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발표해 온 인류운명공동체(2012)·아시아운명공동체(亞洲命運共同體, 2015)·중화민족공동체(2017)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을 겨냥한 글로벌 전략, 개발도상국과 주변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전략, 중국 내부 통합을 위한 전략 등 세 가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부와 동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으로서는 몸집이 달라진 만큼 그에 걸맞게 국제문제, 주변국 문제, 국내 에스닉(ethnic) 문제 등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입장이지만¹,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새로운 질서는 중국식 ‘천하질서’이고,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다. 신중화제국체제로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정책 배경에 존재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 고유의 세계관과 사유 습관 그리고 행동양식이다. 이를 아우르는 이론이 이른바 천하주의 또는 중화주의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이 또 하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이유²—물론 국가 정책으로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지만—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葛兆光, 2018, 「“何が中國か”の思想史」, 『思想』 6, 12쪽.

2 葛兆光, 2019.1, 「再談思想史在當代中國的重要性」, 『書城』,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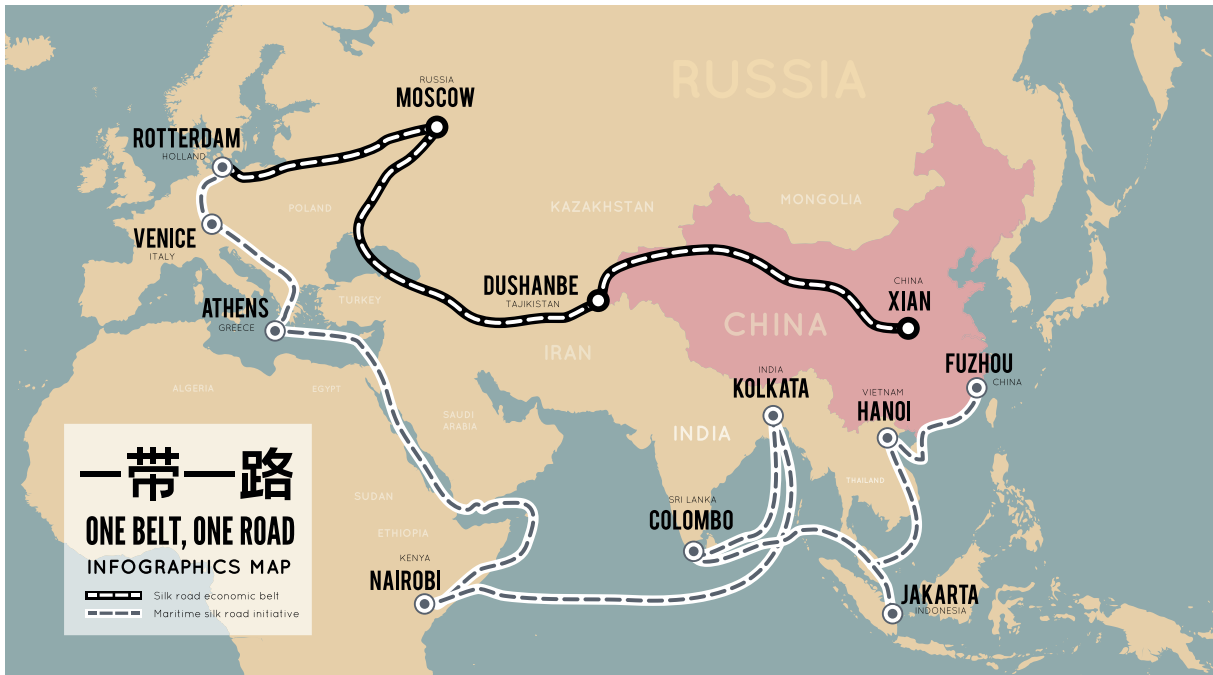


2022년 10월 16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21세기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선 과학기술로 구축한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소프트 파워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대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천하주의를 대립 구도로 천명한 것은 소프트 파워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의하면 전자는 패도이며, 후자는 왕도다. 후자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몰신화 정도가 훨씬 우려할 수준인 중국이 이러한 구도를 논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 자유주의 질서가 쇠퇴일로에 있는 반면, 권위주의는 상승 국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 징후로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꼽는다. 아울러 2022년 11월 유엔 50개국의 신장(新疆) 인권탄압 규탄에 개발도상국 100개국이 중국을 지지했다. 이것으로 중국은 한껏 고무되어 있다.³

국제정치학에서 천하주의에 근거한 천하질서는 하이어나키(hierarchy)를 의미하지만 이론적 기반은 왕도와 덕치라는 '보편주의'다. 누구든 '중심[華]'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주의의 근거다. 왕도와 덕치의 유무에 따라 '화(華)'가 '이(夷)'가 되고, '이(夷)'가 '화(華)'가 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21세기 중국

3 한중구, 2022.11.1, 「중국, 유엔 50개국 신장 인권탄압 규탄에 '100개국 우리 지지」, 『연합뉴스』.



지도로 표현한 일대일로

이 다시 자기중심의 보편을 만들려 할 때 천하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식 국제규범을 만들어 세계에 확산해야만 명실상부한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공식·비공식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를 물질로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가 인류운명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상적 토대가 천하주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 능력을 보유한 정치·경제의 힘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학문적 역량에 의한 객관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세계를 경영할 미래의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당국체제가 강화될 시진핑 3기에서 역사학과 철학은 이전보다 강도 높게 국가주의화를 요구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더욱 부강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극하는 것이 서방 국가들과 그 나라 지식인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중국은 한국에 고담준론이 아니다. 존망의 문제 그 자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도 긴장과 균형감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글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나타난 천하주의와 중화민족공동체의 문제를 동아시아사와 중국 현대사상을 연구하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말하려는 것이다.

2. 신중화제국체제와 유교의 부활

시진핑 3기 체제는 신중화제국체제가 부활할 것임을 선명하게 내걸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1백 년 만의 대변동(百年未有之大變局)'을 이용하여 미국을 추월한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최고강령이 현실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명분으로 시진핑 1인 체제 아래 사상과 행동을 당의 20대 정신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사실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학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천하담론과 강역(疆域)담론이 이미 대세가 되었다. 당시 '왜 중국인가', '중국을 말하다', '갱신중국(更新中國)' 등 다양한 중국론이 펼쳐졌던 것은 중국의 안(內)과 밖(外)이 변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중국의 정체성 찾기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과 중국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천하질서의 시각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치욕은 예외적인 시기에 불과하며, 본래의 중화제국체제로 귀환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다. 따라서 몸집이 달라진 중국 으로서는 국제적 충돌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케이크를 다시 분배해야 한다. 필자는 이 욕망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중국이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그로 인해 받은 민족적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은 이 치욕을 신중화제국(Pax Sinica)으로의 귀환을 통해 만회하고,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다시 존중받고, 세계 질서는 ‘천하질서’로 재편될 것이다.”⁵

이 서사는 중국인의 심리를 100년 이상 지배해 온 것으로서 피해사관과 복수사관이 핵심이다. 필자는 중국이 G2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문명이나 사회주의보다는 중국인의 심리 저변에 깔린 ‘지배서사(dominated narrative)’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본다. 이 ‘지배서사’를 지속시켜 주는 사상적·심리적 기제는 천하주의와 내셔널리즘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20세기 중반까지 ‘천하에서 국가로’라는 근대 민족주의의 방향과 더불어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대의 확보한 강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오래된 ‘지배서사’에 중국의 통치자와 인민의 암묵

4 「全面學習, 全面把握, 全面落實黨的二十大精神」, 『求是』 2023.1.18.

5 조경란, 2021.12, 「중국의 '메타서사'와 소프트 파워의 딜레마」, 『철학연구』 135, 93쪽.

적 동의를 현재까지 이어져 시진핑의 장기독재와 비전을 현실화하는 심리적·정서적 기반이 되었다.

중국은 21세기형 중화제국체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치 도구로만 남아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역부족이라 판단했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 박물관에 처박아 두었던 공자와 유교를 정치선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다시 끄집어냈다. 공자는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문화적 상징으로 정치적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결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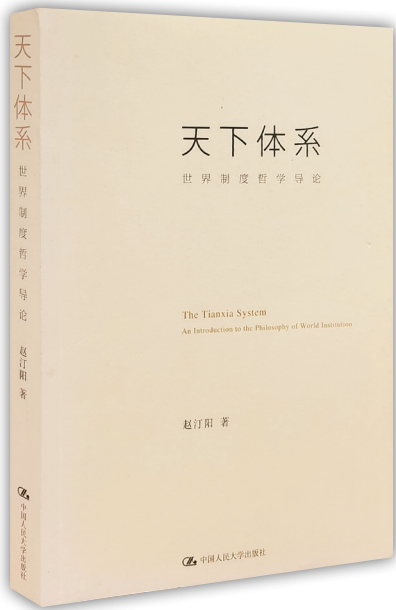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의법치국 이덕치국(依法治國 以德治國)’의 상호결합을 실행해…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한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유교 사상이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원용되는 것, 이것이 중국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이덕치국(以德治國)은 중국 한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유법체제(儒法體制, 유가와 법가가 결합된 통치체제)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다.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진 것이 문화강국 사회주의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서도 자신감(文化自信)을 내보이는 근거는—밖에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유가와 법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이다. 두 사상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면에서 정반대지만 한나라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이 대립을 협력의 정치학으로 이용했다. 그래야만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천하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의 21세기 버전인가

하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전통을 부활시킨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국체제 아래서다. 시진핑 체제에서 패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안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통치 이념과 당의 강력한 지도로 펼쳐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진핑 집권 초기 ‘바보야 문제는 당이야’라는 소련 해체를 반면교사로 하는 패러디가 나온 것은 그래서다. 중국공산당에 의하면 당의 영도 아래 전통사상이 운용되고 인민을 교화시켜야 한다.



자오팅양의 『천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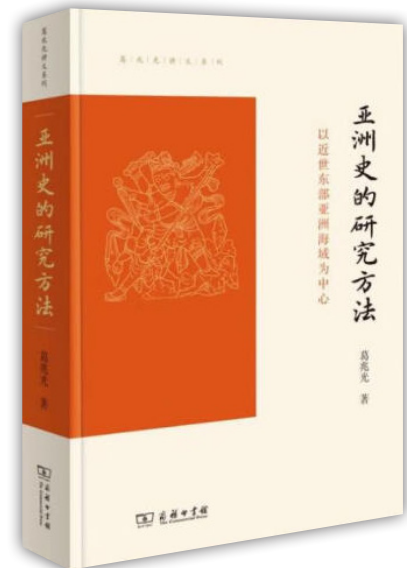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막고 …이상이 있고 도덕적이고 문화적 지식이 있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인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여기서 천하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오팅양(趙汀陽)에 따르면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가 주장한 ‘제국 모델’은 서양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반영일 뿐이지만 중국의 ‘천하 모델’은 국가 간의 관계주의적 비전을 말하므로 호혜적이다. ‘포스트 공산주의’로 천하주의가 선택된 것이다. 이 점은 푸틴의 이데올로기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의 네오유라시아주의자 알렉산드르 두긴(Александр Гельевич Дугин)과도 통한다. 이들은 각각 ‘천하’와 ‘유라시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식의 ‘보편’을 만들어 제국을 유지하려 한다.⁶

그렇다면 자오팅양이 말하는 천하체계란 과연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천하체계는 주나라를 모델로 한 유토피아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중국은 민족주의를 초월한 보편주의 추구를 명분으로 천하주의를 내세우지만, 내부에서도 세계주의를 가장한 중국식 민족주의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중국 내부에서 자오팅양의 천하주의가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한 대표적 논자는 거자오광(葛兆光)이다.⁷

이 대목에서 중국 정부와 지식인이 주장하는 천하주의와 아시아운명공동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어떤 기시감을 준다. 아시아 침략 합리화를 위해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 결성과 근대 초극론(超克論)이 그것이다. 메이지(明治) 유신을 통해 강국



거자오광의 『아시아사 연구방법』

6 일본발 천하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福嶋亮大, 2021, 『ハロー、ユーラシア 21世紀'中華'圏の政治思想』 講談社 참조.

7 葛兆光, 2015, 「對'天下'的想像 - 一個烏托邦想像背後的政治、思想與學術」, 『思想』(臺灣) 2015年 第29期, 1쪽.

이 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는 모습과 개방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부강해진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상호의존적 경제권을 만들려는 행태가 오버랩 된다. 당시 일본은 서방의 패도에 아시아의 왕도로 맞서자고 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패도에 중국의 인의(仁義)에 기초한 왕도사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유법체제에 근거한 강대한 다민족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 즉 중화제국 시스템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공산당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안에 이러한 전통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이(華夷)체제적 중화사상 바탕 위에 서양의 제국주의 방식이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자본의 공간이동’이라는 일대일로의 비판에서 보듯 서양의 식민 방식을 중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 서양의 패도에 중국(또는 동양)의 왕도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과 일본이 자신의 속내를 숨기기 위한 습관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중국의 거버넌스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서양 제국주의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양의 문법을 이용하여 자기를 강화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근대성이 탈각되지 않은 채 제국주의적 방식이 더해져 전제적 형태의 국가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정치이론이나 국가이론으로는 현재의 중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는 아직은 매우 모호하지만 중국공산당이 만들려는 국제질서의 모습이기도 하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인류운명공동체론은 천하주의와 중국 중심론이 기이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⁸ 이는 서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중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식적이라도 국제정치가 베스트팔렌체제의 주권적 평등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너지고 천하질서의 위계가 세워질 것인지는 짧으면 10~30년이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4. 중화민족공동체와 일방적 동화주의

중국 내부의 통합과 관련하여 제20차 공산당대회 개최식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를 제시했다. 중화민족공동체는 소수민족 동화정책 강화를 선언한 것—중화민족공동체의 중요성은 2019년 신장에서,

8 張菲·陸衛明, 「近現代中國文化民族主義評析」, 『理論月刊』, 2003年 03期, 42쪽.

2022년 3월 내몽골에서, 그리고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대회 개막식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었다—이
지만 홍콩의 조기 흡수와 타이완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타이완 수복’은 마오쩌둥이 남긴 과
제이기도 하지만 역대 왕조의 ‘대일통’(大一統, 천하통일)의 실현으로 얻어지는 ‘정통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중화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한족을 중심으로 인종적·문화적 동화주의가 이전
보다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역사, 문화, 언어, 종교 등에서 말살정책이 실시되어 소
수민족의 다원성은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중국은 고대부터 한족과 소수민족이 일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화하와 이적이 일체’임을 주장
하고 있다.

중화민족공동체라는 구호는 중국의 인류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 1910~2005)이 주장한 중화민족다원
일체구조론(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의 폐기를 의미한다. 페이샤오통의 핵심 주장은 “중화민족은 56개 민족
의 다원으로 형성된 일체이며, 높은 단계의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민족 실체”라는 것이다. 다원(多元)의 토
대 위에서 일체가 된다는 것이며, 다원이 들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
원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중화민족공동체가 현실화할수록 에스닉의 다원성은 약화하고, 일방향적인
동화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사실 ‘중화민족’이라는 모델의 오리지널 저작권은 청말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啟超)에게 있
다. 그가 이 개념을 창안한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통치구역으로는 역사상 최대였던 청나
라의 강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국민국가나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국제적 추세 때문이
었다. 물론 당시에는 혁명가 쑨원(孫文)의 오족공화(五族共和)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컸다. 즉 왕조가 무너
지고 근대국가 체제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국’의 영역은 그대로 둔 채 국민국가의 형태를 취하
는 것, 다시 말해 량치차오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로 변환해야 하지만
청나라의 넓은 강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중적 과제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에 그는 중국이
‘현대국가’라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의 광대한 중국이 가지고 있
는 ‘국성(國性)’을 발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튀르키예처럼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량치
차오는 단기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장기적으로는 ‘천하’질서의 재구성을 꿈꾼 것이다.

중국의 중화민족공동체 주장에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은 그 목표가 소수민족이나 타이완 복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안에는 전통 시대 사이(四夷)에 대한 전략이 숨어 있고, 이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 고대사 속의 고구려를 ‘속국’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중국인을 어
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중국이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다. 이러한 역사 왜곡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면 한중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문화기원 논쟁은 한층 더 격
화될 것이다.

중국의 주변 국가 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 3기의 계획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로벌하게는 천하주의로, 주변국에는 친하고 성심껏 혜택을 주고 포용하고(親誠惠容), 멀리 떨어진 개발도상국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여기서 핵심은 조공체제 안에 있던 주변국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더 정성을 쏟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한국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지만, 중국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앞서 유엔의 신장 인권탄압 규탄에 개발도상국 다수가 중국을 지지하였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결과에 대해 아프리카와 남미에 특별히 ‘투자’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혁명기에 성공한 농촌의 도시 포위 정책을 이제 국제정치에 적용하려 한다. 개발도상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포위하여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구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규범과 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우군 포섭 전략이다.⁹

5. 중국 지성의 위기와 한중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길’에 대해 과도할 만큼의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19세기 중후반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150년간 와신상담한 끝에 이제 다시 패권국가로 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규모의 경제는 역설적으로 지성의 붕괴, 문명의 절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이르고 있다. 당국체제의 강국화 전략은 정치 이외의 모든 부분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지성사적 위기’로 규정한다.

천하주의와 중화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를 대상화시키지 못하므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객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기를 대상화하고 현 단계에서 세계 지식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종합으로 나아가는 것은 국가의 학문적 역량이다. 그러나 중국의 학문은 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시진핑 3기에서 사상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시기 사상통일을 기획한 ‘반우파 투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화제국체제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세 종류의 공동체론(인류문명공동체론, 중화민족다원일체론, 중화민족공동체론)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식(粉飾)하는 천하담론에는 법고(法古)만 있지 창신(創新)이 없다. 단순한 ‘자기회귀’일 뿐이다. ‘21세기 중국의 길’이 세계와 아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통 시대의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길이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적 보편을 생산할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은 1989년 냉전 해체 이후 최대의 변곡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한가해 보인다. 우리는 세계

9 Catherine Jones, 2018, *China's Challenge to Liberal Norms*, London: Palgrave Macmillan, 52.

사와 아시아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되 진보와 보수의 엇갈린 시각으로 구축된 이념의 장막은 걷어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재편되고 있다. 권위주의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바로 옆 나라이다. 중국은 지경학, 지정학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중국과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통용되어 온 ‘중국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서방의 중국인식과도 차별화되는 한국의 중국인식 패러다임 재구성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조경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동아시아와 중국 현대사상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일보 ‘차이나 인사이트’, 주간동아 ‘조경란의 21세기 중국’ 고정란 칼럼니스트를 지냈다.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20세기 중국 지식의 탄생』, 『국가, 유학, 지식인』 등의 저서가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